

북한 사교육의 현황과 특징: 시장화 이후의 확산과 변화¹⁾

이혜란 | (사)북한개발연구소 연구위원 | graceful2020@naver.com

I. 서론

김정은 시대 북한은 교육을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교육체계의 재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2년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도입한 데 이어, 2026년 4월부터는 제2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에 따라 전국의 고급중학교와 기술고급중학교에서 문과, 이과, 예능, 체육, 기술 분야의 선택과목제를 전면 실시하였다.²⁾ 2026년 2월 조선로동당 제9차 당대회는 도시와 농촌 간 교육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것을 교육 부문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고, 같은 해 9월 개최된 제15차 전국교원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교육사업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교육의 가치는 금전으로써 계산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다.³⁾

그러나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공교육의 청사진과 달리, 교육 현장에서는 사교육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4월 도(道) 제1중학교 학생이 방학 중 금전을 받고 개인 교습을 한 사실이 신고되어 일반 중학교로 전학 조치되었으며, 이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학생보다 신고자를 비판하는 여론이 우세하였다고 한다.⁴⁾ 단일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 보도는 사교육이 단속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재교육기관의 학생이 공급자로 나설 만큼 수요가 형성되어 있으며, 사교육

1) 본고는 이혜란, 「북한 사교육의 현황과 특징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4), 2025를 토대로 최근의 변화를 추가하고 일부 수치를 재분석하여 작성되었다.

2) 『통일뉴스』(2026. 7. 24).

3) 『조선신보』(2026. 9. 3); 『SPN 서울평양뉴스』(2026. 9. 3).

4) 『데일리NK』(2026. 4. 2).

거래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도가 당국의 공식 입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에서 사교육은 무상의무교육 원칙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2011년 채택된 「보통교육법」은 ‘비법적인 개인교수행위’를 행정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은 사교육을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간주하여 단속해 왔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교육 부문에서도 공식 제도와 실제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 교육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강령과 학제 등 공식 제도와 함께,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어떤 교육을 누구에게서 받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사교육이 공교육과 병존하는 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 아래, 필자가 2021년 탈북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사교육의 형성 배경과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 2022년 이후 나타난 변화와 북한 당국의 대응을 검토하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북한 사교육의 형성 배경

1. 공교육의 약화와 수재교육의 확대

북한에서 교육은 오랫동안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영역이었다. 1975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 시간표에 이르기까지 중앙에서 결정하는 체계가 유지되었다. 주민들 역시 교육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⁶⁾

이러한 체계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크게 약화되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교육 시설과 기자재 부족, 교사와 학생의 결석 증가 등으로 공교육의 질이 저하되었고, 2000년대 초반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교육에서의 사적 영역이 점차 확대되었다.⁷⁾

한편, 북한은 부족한 교육 예산을 선택적으로 투자하여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자 수재교육을 확대하였다. 1984년 평양제1중학교가 신설된 이후 1985년에는 각 도에, 1990년대에는 시·군·구역 단위까지 제1중학교가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200여 개에 이르는 수재학교가

5) 엄현숙, 「2000년대 이후 교육법제 정비를 통한 북한 교육의 현황」, 『현대북한연구』, 20(1), 2017.

6) 김정원, 「북한 교사가 바라보는 북한 학교교육의 의미」, 『통일교육연구』, 13(2), 2016.

7) 조경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17(4), 2007.

생겨났다. 1999년 채택된 「교육법」은 수재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고등교육과 수재교육
부분의 학생 모집은 실력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008년 이후 시·군 단위 제1중학교
를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나, 평양과 도 단위의 제1중학교는 유지되었다.⁸⁾
제1중학교가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대학 진학의 통로로 인식되면서 입학 경쟁이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⁹⁾

2. 교원의 생계와 사교육 공급

사교육의 공급 측면에서는 교원의 생계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배급과 임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교사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생계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
다.¹⁰⁾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는 국가가 배치한 공식 직장과 실제 생계를 유지하는 활동이
분리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연구도 있는데, 교사의 경우 학교가 전자에, 개인 교습이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¹¹⁾

북한 당국도 교원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5년 「교원법」을
채택하여 교원의 생활비를 비생산 부문 사무원 가운데 높은 수준으로 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였
다. 그러나 교원의 기본 생활비가 시장을 통해 얻는 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한 교원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¹²⁾ 최근 공공부문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환율과 물가가 급등하면서
주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도 북한 교원의 실질 소득
문제는 개선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¹³⁾

3. 시장화와 사교육 수요

수요 측면에서는 간부 선발 기준의 변화와 시장화에 따른 계층 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출신 성분과 충성심을 우선하던 간부 정책이 김정일 시기에 학력과 실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면서 대학 진학의 가치가 높아졌다.¹⁴⁾ 여기에 시장 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한 계층이 등장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가 가능해졌다. 평양과 해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10년대 대도시 중심부에서 사교육 공간이 확산되었으며 주로 경제적 상층의

8) 엄현숙(2017).

9) 조정아,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2005; 조정아(2007).

10) 이해란, 「탈북대학생 학업성취 영향요인 탐색」,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11) 김화순, 「분열된 노동-「직(職)」-업(業)의 분리」 이후 작은 생명들의 투쟁」, 『인문논총』, 83(2), 2026.

12) 엄현숙(2017).

13) 정승호, 「북한 제9차 당대회 평가: 경제 전반」,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3월호, 2026.

14)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선인, 2007.

자녀들이 사교육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탈북민 면담에 기초한 연구들도 부모의 능력에 따라 이른바 ‘인공수재’가 양성되고 교육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¹⁵⁾

공교육 자체의 비공식적 비용 부담도 사교육 수요와 관련된다. 학교가 학부모에게 각종 부담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비용이면 개인 교사에게 배우게 하는 편이 낫다는 학부모의 인식이 보도된 바 있다.¹⁶⁾ 공교육이 비공식적으로 유상화된 조건에서는 학부모들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비용 대비 효과 관점에서 비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사교육은 공교육과 분리된 현상이라기보다 공교육의 기능 약화와 맞물려 형성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Ⅲ. 북한 사교육의 현황: 탈북학생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 조사 개요와 사교육 경험 비율

조사는 2021년 1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북한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내 재학 탈북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7.2세이며, 북한 거주 지역은 함경북도(52.8%)와 양강도(33.0%)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에서의 주된 생계 수단은 장사가 62.4%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북한에서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77명으로 39.1%였다. 통일부가 2013~22년 탈북민 6,351명을 조사한 결과에서 사교육 경험자가 10.1%, 가정교사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37.1%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¹⁷⁾ 이러한 차이는 조사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조사가 18세 이상 탈북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조사의 응답자는 비교적 최근에 북한에서 학령기를 보내고 현재도 학업을 이어 가고 있는 학생들로, 사교육의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한다. 통일부 조사에서도 사교육 경험 비율은 10대 응답자에서 33.3%, 20대에서 15.2%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39.1%라는 수치는 북한 주민 전체의 평균이라기보다 시장화 이후 학령기를 보낸 세대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15) 김혜진, 「북한 교육열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이해란(2024);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통일연구원, 2017; 조현정, 「북한 교육에서 사교육 활용의 양상과 그 의미」, 『교육과학연구』, 53(4), 2022.

16) 『데일리NK』(2024. 5. 8).

17)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

탈북 시기별로 구분하면 이러한 특징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2011년 이전에 탈북한 응답자의 사교육 경험 비율은 24.1%였으나, 2012~15년 탈북한 응답자는 50.8%, 2016~20년 탈북한 응답자는 49.1%로 나타났다. 사교육 경험자의 평균 연령(25.5세)도 무경험자(28.3세)보다 낮았다.¹⁸⁾ 통일부 조사에서도 탈북 시기별 사교육 경험 비율은 2000년 이전 3.2%에서 2006~10년 8.4%, 2011~15년 13.2%, 2016~20년 14.1%로 꾸준히 상승하였다.¹⁹⁾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시기로 올수록 사교육이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변의 사교육 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가 확인된다. 거주하던 동네나 학급의 학생 10명 중 사교육을 받은 학생 수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평균 2.2명이었는데, 사교육 경험자는 평균 3.0명, 무경험자는 평균 1.7명으로 답하였다. 이는 사교육이 전체 학생에게 고르게 확산되었다기보다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 사교육의 형태와 공급자

사교육 경험자의 응답 분포는 <표 1>과 같다. 사교육의 형태는 일대일 과외(64.3%)가 그룹 과외(35.7%)보다 많았고, 장소는 교사의 집(66.7%)이 가장 많았다. 주당 3회 이상 받았다는 응답이 56.2%, 2년 이상 받았다는 응답이 55.7%로, 사교육이 단기적인 보충보다는 지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시작한 시기는 초급중학교(42.0%)가 가장 많았으나, 소학교와 유치원 단계에서 시작한 경우도 39.1%였다.

과목은 복수응답 기준으로 수학(52.8%)이 가장 많았고, 예체능(48.6%), 영어(43.1%), 국어(25.0%), 과학(18.1%) 순이었다. 학업 관련 과목만 받은 경우가 38.9%, 예체능 등만 받은 경우가 34.7%, 둘 다 받은 경우가 26.4%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소학교 단계에서는 수학(54.3%)과 국어(40.0%), 예체능(40.0%)이 많았고, 초급중학교 단계에서는 예체능(50.0%)과 수학(47.8%), 영어(37.0%)가, 고급중학교 단계에서는 영어(43.5%)와 수학(41.3%), 예체능(39.1%)이 많았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영어와 과학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교육 참여는 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58.1%로 본인이 결정한 경우(35.1%)보다 많았다.

사교육의 목적은 상급학교 진학(26.7%)과 좋은 직업(20.0%)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반면, 학교 수업 보충은 6.7%에 그쳤다. 이는 북한의 사교육이 학교 수업을 보충하는 수단보다는 진학과 직업 등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8) 두 집단의 연령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09$, $p=.002$).
19) 통일부(2024).

〈표 1〉 사교육 경험자의 응답 분포

구 분	응답 분포(%)
형태	일대일 과외 64.3, 그룹 과외 35.7
장소	교사 집 66.7, 학생 집 14.7, 교실 9.3, 기타 9.3
지도 교사	담임교사 38.2, 다른 학교·학급 교사 25.0, 대학생 9.2, 대학 교원 6.6, 기타 21.1
과목	수학 52.8, 예체능 48.6, 영어 43.1, 국어 25.0, 과학 18.1, 기타 20.8
시작 시기	유치원 8.7, 소학교 30.4, 초급중학교 42.0, 고급중학교 18.8
기간	1년 미만 22.9, 1~2년 21.4, 2~3년 24.3, 3년 이상 31.4
주당 횟수	1회 15.1, 2회 28.8, 3회 24.7, 4회 이상 31.5
목적	상급학교 진학 26.7, 좋은 직업 20.0, 부모의 권유 18.7, 수업 보충 6.7, 기타 28.0
사교육 결정권자	부모 58.1, 본인 35.1, 교사 4.1, 기타 2.7
지불 수단	중국 위안 46.7, 북한 원 29.3, 곡식 14.7, 달러 8.0, 기타 1.3

자료: 이혜란, 「북한 사교육의 현황과 특징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4), 2025의 조사 자료를 재집계.

공급자 측면에서는 현직 교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사교육을 지도한 사람은 담임교사가 38.2%, 다른 학교나 학급의 교사가 25.0%로 현직 교사가 63.2%를 차지하였고, 대학 교원을 포함하면 69.8%였다. 이는 전문 강사와 대학생이 중심인 남한의 사교육과 구별되는 특징이며, 통일부 조사에서도 사교육 교수자는 학교 교사가 55.8%로 가장 많았다.²⁰⁾ 공교육의 교사가 사교육의 주된 공급자라는 점은 교사에게는 사교육이 생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성적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학교 수업의 질이 낮을수록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교사가 공교육에 충실할 유인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교사 출신 탈북민의 구술을 분석한 연구도 북한의 중등교사들이 학생 개인의 실력 향상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교사의 실행 정도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²¹⁾

3. 사교육비와 지불 수단

사교육비는 북한 원보다 외화와 현물로 지불된 경우가 많았다. 지불 수단은 중국 위안이 46.7%로 가장 많았고, 북한 원 29.3%, 곡식 14.7%, 달러 8.0% 순이었다. 금액을 응답한

20) 통일부(2024).

21) 조현정, 「북한 중등교사들의 교수방법 실행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과학연구』, 54(3), 2023.

경우를 보면 위안화는 월 25~300위안(중양값 100위안), 달러는 월 10~50달러, 곡식은 쌀이나 옥수수 1~20kg이었다. 북한 원으로 응답한 금액은 50원에서 30만원까지 편차가 컸는데, 이는 응답자들의 탈북 시기가 20년 이상에 걸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안화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데에는 응답자의 다수가 북중 접경 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불 수단이 외화와 현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사교육이 비공식시장의 거래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사교육을 중단한 이유로 비용 부담을 든 응답이 24.3%였다는 점도 사교육비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었음을 시사한다.

4. 가정 배경에 따른 차이

가정 배경에 따른 사교육 경험 비율은 <표 2>와 같다. 생활 형편이 잘사는 편이었다는 응답자의 58.2%가 사교육을 경험한 반면, 어려운 편이었다는 응답자 중 사교육을 경험한 경우는 16.7%에 그쳤다. 장사로 생계를 유지한 가구(43.9%)는 배급(23.1%)이나 농사(17.2%)에 의존한 가구보다 경험 비율이 높았고, 아버지가 당원인 가정(46.0%)도 그렇지 않은 가정(28.4%)보다 높았다. 학교 성적이 높았다는 응답자의 경험 비율(50.6%) 역시 낮았다는 응답자(26.5%)보다 높았다. 반면, 성별, 도시 규모, 접경 지역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응답자들이 제시한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46.0%)에 이어 비용 부담(31.9%)이 많았다. 통일부 조사에서도 사교육 경험 비율은 소득 상층 21.0%, 중층 11.5%, 하층 4.6%로 소득 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접경 지역(9.7%)과 비접경 지역(10.6%)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평양은 20.1%로 두 배 수준이었는데, 본

<표 2> 가정 배경에 따른 사교육 경험 비율

구분	집단별 경험 비율(%)	$\chi^2(p)$
생활 형편	어려운 편 16.7, 보통 37.3, 잘사는 편 58.2	21.84(p<.001)
생계 수단	배급 23.1, 장사 43.9, 농사 17.2, 기타 63.2	14.43(p=.002)
부친 당원 여부	당원 46.0, 비당원 28.4	5.88(p=.015)
학교 성적	낮음 26.5, 보통 32.1, 높음 50.6	8.62(p=.013)

주: 생계 수단의 '기타'는 밀수 등을 포함한다.
자료: 이해란, 「북한 사교육의 현황과 특징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4), 2025의 <표 5>를 재분석.

조사에는 평양 출신 응답자가 없어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²²⁾ 이러한 결과는 평양을 제외하면 사교육 기회가 거주 지역보다는 가정의 경제력과 정치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계층과 정치적 지위를 가진 계층이 자녀 교육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사교육이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2022년 이후 사교육 시장의 변화와 당국의 대응

1. 사교육 시장의 변화

2021년 조사의 응답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탈북하였으므로, 이후의 변화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보도는 특정 지역의 사례에 기초한 경우가 많아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나, 조사에서 확인된 사교육의 구조가 국경 봉쇄와 사회 통제 강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일관되게 전하고 있다.²³⁾

관련 보도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과목과 공급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주요 과목과 예체능 외에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작동 및 수리 방법을 가르치는 과외가 등장하였고, 북중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배경으로 접경 지역에서 중국어 개인 교습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진학과 직업이 사교육의 주된 목적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교육이 진학뿐 아니라 직업과 생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급의 변화는 팬데믹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 교수자가 학교 교사였다는 응답은 2011년 이전 탈북한 응답자 61.8%에서 2012년 이후 탈북한 응답자 53.4%로 낮아진 반면, 전문 개인지도 교사였다는 응답은 30.1%에서 41.0%로 높아졌고, 2016~20년 탈북한 응답자에서는 49.7%에 이르렀다.²⁴⁾ 교사의 부업 형태로 출발한 사교육이 점차 전업 형태로 분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는 외화 기준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도된 사교육비는 월 120~300위안, 월 30달러 수준으로 2021년 조사에서 확인된 월 25~300위안, 10~50달러와

²²⁾ 통일부(2024).

²³⁾ 『데일리NK』(2025. 2. 20; 2025. 10. 16; 2026. 4. 2; 2026. 6. 18; 2026. 9. 11).

²⁴⁾ 통일부(2024).

유사하다. 반면, 같은 기간 북한 원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였다. 북한의 시장 환율은 2019년 달러당 약 8,000원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 급등하여 2026년 3월에는 4만 1,300원을 상회하였다.²⁵⁾ 이에 따라 월 30달러의 사교육비를 북한 원으로 환산하면 2019년 약 24만원에서 2026년 3월 약 124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교육 시장의 양측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화나 현물로 사교육비를 받는 공급자에게 사교육은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북한 원으로 소득을 얻는 가구에는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최근 북한경제의 회복이 공식 부문에 집중되고 시장과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고려하면,²⁶⁾ 환율과 물가의 불안정이 사교육 접근성의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 당국의 대응과 2026년 교육 개편

북한 당국은 사교육에 대해 단속으로 대응해 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통교육법」은 불법적인 개인교수행위를 행정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일부 보고서에서도 북한 당국이 개인 과외를 포함한 사교육을 비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적발 시 노동단련형 부과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그러나 단속이 사교육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속을 집행하는 간부층이 사교육의 주요 수요자이기도 하고, 공급자인 교원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급 유인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뇌물로 무마되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도 이를 뒷받침한다.²⁸⁾ 국가의 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나름의 대응 방식을 찾아 왔다는 지적은 교육 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다.²⁹⁾

2026년의 교육 개편은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선택과목은 2013년 교육강령에서 고급중학교 단계에 부분적으로 도입된 바 있으며, 2024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4월 전국의 고급중학교와 기술고급중학교로 확대되었다.³⁰⁾ 선택과목제는 분야별로 심화된 내용을 교육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험·실습 설비와 전공별 교원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실험 기구와 시약의 부족으로 수업이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이 금전을 써서 전공반에 들어가는 현상이 교육 부문의 비리로 지적되었다는

25) 정승호(2026). 북한 원 환산액은 필자가 계산하였다.

26) 이종규, 「기로에 선 북한경제: 2025년 평가 및 2026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1월호, 2026.

27) 통일부(2024).

28) 『데일리NK』(2024. 5. 8).

29) 김성경, 「북한 사회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2025년 북한 사회 평가 및 2026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2월호, 2026.

30) 김진숙, 「북한 김정은 체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통일과 법률』, 통권 28호, 2016; 통일뉴스(2026. 7. 24).

보도가 있다.³¹⁾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도가 요구하는 교육 수준과 학교가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수준 사이의 차이를 사교육이 보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전공 선택이 진로와 연계될수록 특정 전공반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1990년대 수재교육 확대가 제1중학교 입학 경쟁과 사교육 수요로 이어졌던 상황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V. 결론

본고는 탈북학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일부 조사와 최근 보도를 함께 검토하여 북한 사교육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교육은 시장화 이후 학령기를 보낸 세대에서 상당히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의 39.1%가 사교육을 경험하였으며, 2012년 이후 탈북한 응답자에서는 그 비율이 약 50%에 이르렀다. 둘째, 사교육의 주된 공급자는 공교육의 현직 교사였다. 이는 교원의 생계 문제와 공교육의 기능 약화가 사교육의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최근 시기로 올수록 전문 개인지도 교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사교육이 교사의 부업에서 점차 독립된 영역으로 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교육비는 주로 외화와 현물로 지불되었으며, 사교육 경험은 가정의 경제력과 정치적 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사교육은 2022년 이후에도 과목과 공급자의 범위를 넓히며 지속되고 있으며, 당국의 단속은 수요와 공급의 유인을 해소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사교육이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공교육과 병존하는 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의 축소를 목표로 제시하고 교육 시설의 확충과 교육강령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확인된 격차는 학교 시설의 차이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기회의 차이로도 존재하고 있다. 교원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고 학교 운영비용의 일부가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조건이 지속된다면, 교육 시설의 확충과 교육강령의 개편만으로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 『데일리NK』(2026. 5. 11; 2026. 5. 18).

앞으로 북한 사교육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선택과목제의 정착 과정에서 전공반 진입과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지 여부이다. 다음으로 환율과 물가의 변동이 사교육비 부담과 계층 간 교육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다. 마지막으로 당국의 대응 방식이다. 단속의 실효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당국이 현재의 단속 중심 대응을 유지할지, 일부 분야를 제도 안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향후 관련 법령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남북 교육 협력을 검토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교육을 학교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학교 시설과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북한 교육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협력이 가능해질 경우에는 교사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처우와 역량 강화, 그리고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농촌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우선은 북한의 교육 개편과 사교육 실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성경, 「북한 사회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2025년 북한 사회 평가 및 2026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26년 2월호.
- 김정원, 「북한 교사가 바라보는 북한 학교교육의 의미」, 『통일교육연구』, 13(2), 2016.
- 김진숙, 「북한 김정은 체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통일과 법률』, 통권 제28호, 법무부, 2016.
- 김혜진, 「북한 교육열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김화순, 「분열된 노동 - ‘직(職) - 업(業)’의 분리’ 이후 작은 생명들의 투쟁」, 『인문논총』, 83(2), 2026.
- 엄현숙, 「2000년대 이후 교육법제 정비를 통한 북한 교육의 현황」, 『현대북한연구』, 20(1),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17.
- 이종규, 「기रो에 선 북한경제: 2025년 평가 및 2026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26년 1월호.
- 이혜란, 「탈북대학생 학업성취 영향요인 탐색」,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 _____, 「북한 사교육의 현황과 특징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4), 2025.
- 정승호, 「북한 제9차 당대회 평가: 경제 전반」,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26년 3월호.
- 조정아,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2005.
- _____,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17(4), 2007.
-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통일연구원, 2017.
- 조현정, 「북한 교육에서 사교육 활용의 양상과 그 의미」, 『교육과학연구』, 53(4), 2022.
- _____, 「북한 중등교사들의 교수방법 실행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과학연구』, 54(3), 2023.
-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선인, 2007.

〈언론자료〉

- 『데일리NK』, 「사교육 시장 커지자 단속 강화…개인 교사 처벌 잇따라」, 2024. 5. 8.
- _____, 「북한도 사교육 열풍…전자기기 다루는 것까지 과외로 배워」, 2025. 2. 20.
- _____, 「북한서 ‘합숙형 음악 과외’ 인기…사교육 시장 점차 확대·발전」, 2025. 10. 16.
- _____, 「방학 중에 과외한 道 1중학교 학생, 일반학교로 강제 전학」, 2026. 4. 2.
- _____, 「선택과목제 전면 도입했지만 인프라 부족…‘무너진 혁신’?」, 2026. 5. 11.
- _____, 「교육 비리 척결 외치자 현장 교사들 원성…교단 이탈 움직임도」, 2026. 5. 18.
- _____, 「북중관계 복원 흐름에 북한 내부서 중국어 과외 열풍 불어」, 2026. 6. 18.
- _____, 「스마트폰으로 외국어 학습하는 北 학생들…교육 격차 갈수록 깊어져」, 2026. 9. 11.
- 『조선신보』,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회의에서 하신 김정은원수님의 연설」, 2026. 9. 3.
- 『통일뉴스』, 「북, ‘제2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주요내용은?」, 2026. 7. 24.
- 『SPN 서울평양뉴스』, 「김정은 “교육사업은 국사 중의 제일국사”... 北,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최」, 2026. 9. 3.